

‘군공항 이전’ 山으로 끌고가는 김산

〈무안군수〉

무안군, “전남 전 지역 대상 공모로 후보지 정해야” 정부에 입장 전달
광주시, “타운홀 미팅 땀 말 없더니”... 무안군의 입장 번복에 난감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 지지 6자 TF 활동 중 원점 회귀 발언에 당혹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주도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무안군의 입장번복으로 또다시 차질을 빚는 것이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군 공항 이전 대상지인 무안군이 정부에 전남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이전 후보지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기존 입장대로 무안으로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호남’ ‘호남’ 민심을 듣는다’의 타운홀미팅을 열고 광주군공항 이전을 국가주도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해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됐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이전 대상지를 무안으로 전제하고 6자 TF 구성 등 해법을 제시했다.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등도 참여하기로 했다.

타운홀미팅 당시 김 군수는 “신뢰가 문제다. 기부대양방식의 1조원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서 “국가주도 이전을 하면서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있다면 제 자신도 군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광주시의 불신을 해결하고 충분한 지원을 약속하던 무안군으로 이전을 동의한다고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대통령도 ‘신뢰’를 문제 해결의 관건으로 보고 6자 TF 해법을 제시한 것이었다.

하지만, 광주군공항 이전현안은 원점으로 회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7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6시30분께 김산 무안군수가 무안군 담당자 2명과 함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김용범 정책실장을 만나 3가지 입장을 구두로 전달했다.

첫 번째는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 달라는 것으로 지난달 타운홀미팅에서 이 대통령이 약속한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제는 두번째 요구사항이다. 무안군은 광주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무안군으로 특정하지 말고 전남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로 진행하자고 요청했다.

세 번째는 광주시가 제안하는 기부대 양여방식을 폐지하고 국가사업으로 전환해달라는 내용이다. 만약 무안군이 후보지로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지원금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현재 대통령실에 꾸려진 광주군공항 이전 TF가 매일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데 무안군의 입장을 충분히 알겠고 이를 잘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타운홀미팅에서 사실상 확정된 사안을 전면 취소해 달라고 요청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광주를 찾아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가 불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

광주시는 무안군의 ‘입장 번복’을 난감해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이미 공항이 있는 무안으로 군공항 이전을 생각하고 이에 대한 당사자로 타운홀미팅에 무안군수를 참석시켜 입장을 듣고 6자 TF 구성을 지시했다”면서 “그렇다면 당초 김 군수는 현장에서 무안이전을 반대하고 공로를 해달라고 이야기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무안군의 공모 요구를 받아들이지는 모르겠지만 공모방식으로 변경되면 군공항 이전을 희망하는 전남지자체를 찾기 힘들 것”이라며 “무안군이 공모방식을 제안한 것은 후보지 신청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비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안군은 입장번복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당시 타운홀미팅에서 김산 군수를 비롯해 무안 주민 3명이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발언을 할 예정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진행방식이 변경되는 바람에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무안군이 타운홀 미팅에서 무안에 국제공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광주군공항이 무안으로 이전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애초 입장을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엔 대통령실에 정확한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hh@kwangju.co.kr



화순 청풍초 학생들이 영화 촬영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웃돌아 폭염경보가 발효됐던 7일 화순군 청풍면 한 느티나무 아래에서 청풍초 학생들이 영화 촬영을 하고 있다. ‘영상으로 담아내는 작은학교’ 프로젝트의 하나로 학생들이 배우·감독·스태프 등의 역할을 맡았다. <관련기사 2면>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윤석열 9일 영장심사...구속 여부 10일 새벽께 결정날 듯

중앙지법 남세진 부장판사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내란특검 구속영장 심사가 9일 이뤄진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 늦게나 10일 새벽께 판

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심문 당일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서 출석할 예정이다. 영장 심문 기일엔 대체로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변호인 일화하에 판사에게 혐의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소명한다. 윤 전 대통령도 심사에 직접 출석해 본인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대통령 재직 당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도 직접 출석해 발언한 바 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

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서는 66쪽 분량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박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 전 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

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두 혐의는 지난달 24일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청구했다 각각된 체포영장에 적시된 바 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족수(11명)를 채우려고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통보받지 못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추가했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심문한 뒤 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갇히게 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한덕수, 광주청에서 선거법 수사 받는다